

전자소재, 광물 규제로 수출 타격

미국, 분쟁지역 광물 사용금지 ... 삼성·LG는 모니터링 강화

미국이 분쟁지역의 광물 사용을 규제함에 따라 국내 전자기업들이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2010년 7월 상원을 통과한 금융규제개혁법안에 콩고, 우간다 등 아프리카 9개 분쟁국가에서 생산한 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등 4가지 광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포함돼 있다”고 2월17일 발표했다.

규제 이유는 광물의 판매대금이 반군의 무기 구입자금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으로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의 모든 상장기업들은 분쟁광물의 사용 여부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고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진흥원은 “미국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부품 공급기업들에게 타격이 될 수도 있다”며 “국내 부품기업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이 이어지면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공급망을 역추적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수출과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미국 주요협회 등이 규제준수에 대한 표준가이드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기업들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2011년 하반기 협력사를 대상으로 4대 광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분쟁지역의 광물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쟁지역의 광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안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하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17>